

## 줄어드는 결혼, 늘어나는 이혼

### Decreasing Marriage, Increasing Divorce



원영희 한국성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적령”에 해당되는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고 만혼과 더불어 동거가족, 사실혼 상태의 가족유형이 점차 많아지는 “결혼지연”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이혼을 저하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 이혼을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 이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표출과 더불어 다른 한편 가족내 갈등 및 위기해소 결과로서 우리 사회 가족 다양성의 표상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우리 사회 결혼율 및 이혼율 변화추이, 결혼감소 및 이혼증가의 원인과 이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결혼감소 및 이혼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을 모색하였다.

#### 1. 서론

그동안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가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가족의 변화는 전통적 가족형태가 감소됨과 동시에 전형적 가족규범의 약화를 가져왔는데 지난 반세기에 걸쳐 우리 사회 가족은 결혼연령의 상승, 결혼율 저하, 출산율 감소, 이혼율 증가, 그리고 가족구조의 다양성 등 과거 전형화된 가족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왔다. 특히, 결혼율 감소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이혼율의 증대는 우리 사

회 가족의 위기를 인식하는데 주요 쟁점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적령”에 해당되는 시기에 결혼하는 것은 그 의미가 점차 퇴색되어가고 있고 만혼과 더불어 동거가족, 사실혼 상태의 가족유형이 점차 많아지는 “결혼지연”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최근 이혼을 저하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이혼을 증가추세는 우리 사회 이혼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 표출로 사회적 우려를 야기시키고 있다.

우리 사회 결혼율 저하 및 이혼율 증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내지 사회의 ‘안정성’,

‘건강성’에 대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결혼지연 및 이혼증가는 현대사회 변화양상의 하나로서 우리 사회 가족위기가 아닌 인간생활 및 가족 변화 그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또한 제시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결혼감소 및 이혼증가에 대한 상반된 시각 내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수용 문제,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다.

본 고에서는 우선 우리 사회 결혼율 및 이혼율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결혼감소 및 이혼증가의 원인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 2. 결혼율 및 이혼율 변화

##### 1) 결혼율 변화

###### (1) 결혼건수 및 결혼율

그 동안 우리나라의 결혼건수 및 결혼율은

1980년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다. 1970년 295,137건에서, 1980년 403,031건으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 399,312건, 2000년 334,030건, 그리고 2003년 304,932건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2004년에는 한 해 동안 결혼건수가 310,944건으로 증가를 보였고, 2005년에는 316,375쌍이 결혼하여 1일 평균 약 867쌍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추세를 살펴보면, 1970년에는 9.2건에서 1980년에는 10.6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 9.3건, 2000년 7.0건으로 낮아졌다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꾸준히 6.4건으로 유지되었다. 2005년 조혼인율은 6.5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지만, 이의 비율은 35년 전인 1970년의 9.2건보다 2.7건이 감소한 것이다.

2004년 이후 결혼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재혼 및 외국인과의 결혼 증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재혼율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는데, 2005년 결혼한 남녀 중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인 재혼커플은 79,600건으로 전체 결혼커플의 25.2%에 달했다. 이의 비율은 2003년 22.1%보다 3.1%p 증가한 것으로,

표 1.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혼인건수	295,137	403,031	399,312	334,030	320,063	306,573	304,932	310,944	316,375
조혼인율*	9.2	10.6	9.3	7.0	6.7	6.4	6.4	6.4	6.5

\* 조혼인율(Crude Marriage Rate):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의 1,000분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 각 년도.

2) 김두섭·김정석·송유진·최양숙,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5.

1) 김승권, 『한국가족의 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  
 장혜경·김혜영·홍승아·은기수·이명진·김영란·주재선·송치선,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10년 전인 1995년 13.4%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왔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2005년 43,121건으로 총혼인건수 중 13.6%에 해당되었다. 2003년 25,658건에 비해 68.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2005년 한 해 동안 혼인한 부부 100쌍 중 13.6쌍이 외국인과 혼인한 셈이다<sup>3)</sup>.

(2) 평균 초혼연령

우리나라 평균 초혼연령은 꾸준한 증가추세로 결혼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다. 남자의 경우 1995년 28.4세였다가 2000년 29.3세, 2005년 30.9세였다. 여성의 경우는 1995년 25.4세였다가 2000년 26.5세, 2005년 27.7세였다. 평균 결혼연령은 2005년과 10년 전인 1995년에 비해 남자는 2.5세, 여자는 2.3세가 각각 많아져 매년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3) 미혼율 추이

초혼 연령의 상승과 함께 미혼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가임여성의 미혼율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대 초반(20~24세) 연령층의 경우 1970년 57.2%였으나 2000년 89.1%로 증가하였다. 20대 후반(25~29세) 연령층의 경우 1970년 9.7%였으나 2000년에는 40.1%였다. 30대 초반(30~34세) 연령층은 1970년에는 1.4%에 해당되었으나 2000년에는 10.7%로 증가하였고, 30대 후반(35~39세) 연령층 역시 1970년 0.4%에서 2000년 4.3%로 증가하였다.

2) 이혼율 변화

(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그 동안 우리나라의 이혼건수 및 이혼율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 1970년 11,615건에서, 1980년 23,662건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1990년 45,694건, 2000년 119,982건, 그리고 2003년 167,096건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2004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2004년에는 139,365건, 2005년에는 128,468건이었다. 2005년은 2004년에 비해 10,897건(-7.8%)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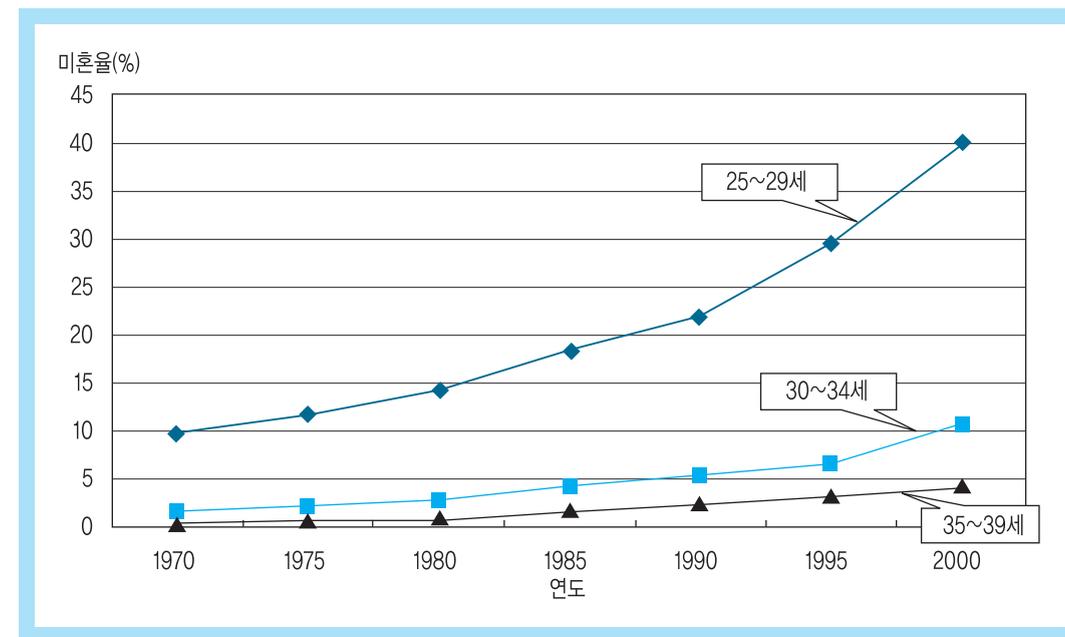
표 2. 평균 초혼연령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28.4	28.4	28.6	28.9	29.1	29.3	29.6	29.8	30.1	30.6	30.9
여자	25.4	25.5	25.7	26.1	26.3	26.5	26.8	27.0	27.3	27.5	27.7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3)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그림 1. 가임여성의 미혼율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연도별 자료.

소한 것으로, 이는 하루 평균 352건(쌍)이 이혼한 셈이다.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역시 2003년까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70년 조이혼율은 0.4건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0.6건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급증하는 추세로 1990년 1.1건, 2000년 2.5건, 그리고 2003년 3.5건으로 증가

하였다. 이후 조이혼율은 다소 감소경향을 보이는데, 2004년에는 2.9건, 그리고 2005년에는 2.6건이었다.

최근 이혼율 저하는 그동안 이혼율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전 상담 등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표 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이혼건수	11,615	23,662	45,694	119,982	135,000	135,014	167,096	139,365	128,468
조이혼율*	0.4	0.6	1.1	2.5	2.8	3.0	3.5	2.9	2.6

\* 조이혼율(Crude Divorce Rate):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7월 1일 기준)로 나눈 수치의 1,000분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다. 또한, 호주제 폐지와 함께 2008년 이후 시행되는 민법에서 아이가 양부(養父)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자에게 유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혼시기를 개정민법 시행에 맞추어 '잡정 연기'하려는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유추해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 이혼을 추이는 앞으로 좀더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평균 이혼연령

부부의 평균 이혼 연령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혼 부부의 평균연령은 남자의 경우 1995년 38.3세였다가 2000년 40.1세, 2005년 42.1세였다. 여성의 경우는 1995년 34.5세였다가 2000년 36.6세, 2005년 38.6세였다. 이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2005년과 10년 전인 1995년

에 비해 남자가 3.8세, 여자는 4.1세 높아진 것이다.

(3) 평균 동거기간

이혼자의 평균 동거기간은 2005년 11.4년으로 10년 전인 1995년 9.4년에 비해 2년 길어졌다. 이는 동거기간이 짧은 부부의 이혼비율이 적어진 반면, 동거기간이 긴 부부의 이혼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세분해 살펴보면 동거기간이 4년 이하인 부부의 이혼건수는 33.2천 건으로 전체 이혼 구성비의 25.9%에 해당되었다. 이는 1995년에 비해 6.7%가 감소한 것이다. 한편,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의 이혼은 24.0천 건으로 전체 이혼 구성비의 18.7%에 해당되며, 이는 1995년에 8.2%에 비해 약 2.3배 증가한 것이다.

표 4. 평균 이혼연령

(단위: 세)

성별/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남자	38.3	38.6	39.1	39.8	40.0	40.1	40.2	40.6	41.3	41.8	42.1
여자	34.5	34.8	35.3	36.1	36.4	36.6	36.7	37.1	37.9	38.3	38.6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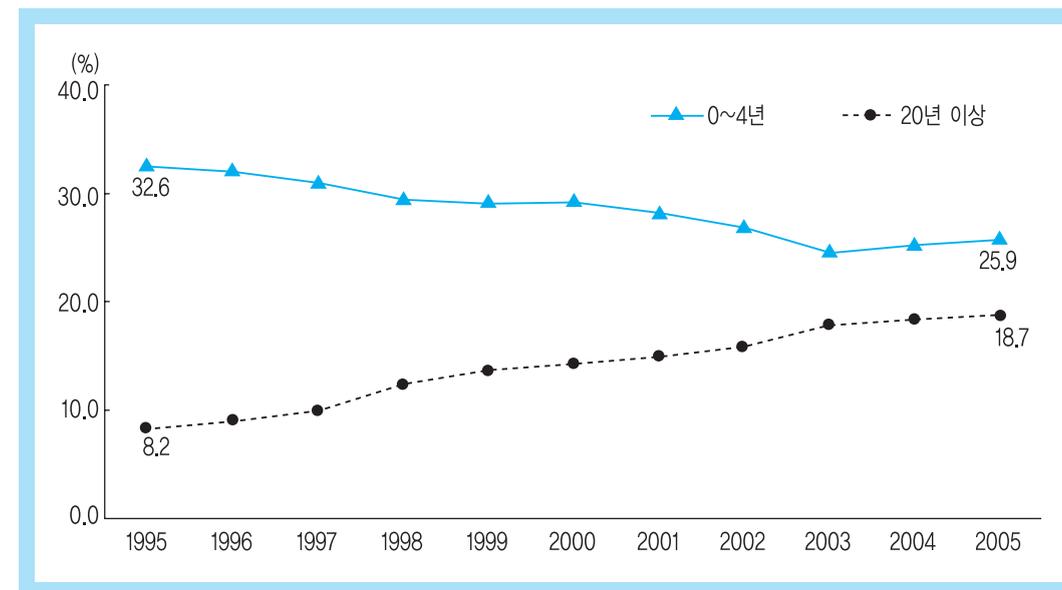
표 5. 평균 동거기간

(단위: 세)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동거기간	9.4	9.6	9.8	10.4	10.5	10.6	10.7	10.9	11.4	11.4	11.4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그림 2. 동거기간별 이혼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혼인·이혼신고에 의한 집계」, 보도자료, 2006. 3.

3. 결혼 감소 및 이혼 증가의 원인 및 영향

결혼 감소나 이혼 증가는 우리 사회 가족의 주요 환경변화로 볼 수 있으며 가족의 안정성 약화 내지 우리 가족이 다양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에서는 우리나라 결혼감소 및 이혼증가의 원인 및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결혼 감소의 원인 및 영향

(1) 결혼 감소의 원인

결혼은 개인이나 가족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결혼은 가족 형성의 출발이면서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시켜 사회를 존속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과거 집합주의적 사상이 점차 개인주의적 사상으로 전환되면서 가족주의의 부계혈연성과 가족우선성의 약화, 개인의 행복추구와 함께 결혼의 중요성이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결혼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개인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 결혼을 저하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새로운 제도가족의 미형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을 비롯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은 인간 삶에 있어서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가부장적 가족의식과 양성평등 의식 사이의 지체 현상이 커져 젊은이에게 결혼은 더 이상 절대적 사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16.5%에 불과하였다. '결혼은 가급적 하는 것이 좋다'가 40.2%로 가장 많았지만 '상황에 따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24.8%,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18.5% 등으로 젊은층에게 있어서 결혼은 선택의 영역임을 보여주고 있다<sup>4)</sup>. 이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점차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는 '보편혼주의(universal marriage)'로서의 결혼관은 점차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결혼생활의 '효용가치'는 과거에 비해 높은 편이 아니며, 결혼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경우 결혼을 최대한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한 가족주의, 가족 내 성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제도내 여성들이 보다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결혼의 지체 내지 기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sup>5)</sup>. 이외에 결혼비용 내지 결혼생활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고려된다. 과도한 결혼비용, 여성의 육아 및 가사역할 전담, 여성의 경

제활동 증가와 이에 따른 여성의 역할과중, 과도한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인적, 제도적 지원의 미비 등 여러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높은 기회비용을 수반케 되는 결혼이 연기 또는 지연되게 되었다.

셋째, 청년층 임금과 고용의 불안정 등 우리 사회 경제적 상황의 어려움은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이는 결혼을 저하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청년층의 실업률과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불안정의 심화는 개인의 경제적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결혼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 조사'에 따르면 고용 및 소득 불안정의 이유가 남성의 경우 3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도 10.8%에 해당되었다<sup>6)</sup>. 또한 2003년 전국가족 조사에서 장래 결혼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미혼남녀 응답자의 50% 정도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고 하였고, 이의 이유에 대해 남성은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서(35.7%)라는 이유가 제일 많았고, 여성의 20.1%는 경제적 기반 부족을 이유로 결혼계획이 없다고 하였다<sup>7)</sup>. 한편, 전반적인 경제적 불황기에는 개인은 적당한 직업선택을 미루게 하고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투자가 늘어나 교육기간 증가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추가교육 소요연한은 다른 사

회적 요인과 맞물려 미혼율을 증가시키고 결혼을 늦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가치관의 와해 및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 전환의 결과로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非婚)이 증가추세에 있다. 개인주의가 바탕이 된 가운데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통한 자아실현, 일방적인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던 구시대 의식에서 탈피 그리고 동거에 대한 젊은이들의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으로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 대신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인 독신 또는 동거나 사실혼 등 대안적 생활양식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005년 전국가족조사'에 따르면 동거에 대해 남성의 경우 매우 찬성 혹은 대체로 찬성하는 비율은 15.4%, 여성은 19.1%가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이가 적을수록 동거에 대한 찬성률이 높은 편으로 10대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고 보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28.2%, 20대는 26.3%, 30대는 19.7%에 해당되었다<sup>8)</sup>.

#### (2) 결혼 감소의 영향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결혼지연 및 결혼율 하락 현상과 관련하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의 이유는 저출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 연유한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sup>9)</sup>은 1960년 6.0명이었던 것이 1990년 1.6명, 1995년 1.65명, 2000년 1.47명, 2004년 1.16명으로

떨어져 소위 '출산파업'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2.69명에 비해 절반도 채 못 되는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 1.56명보다도 더욱 떨어지는 수치이다.

결혼율의 지속적 감소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주며 출산을 저하는 생산연령인구, 즉 노동인구 부족의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노동인구의 현저한 저하는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과도한 사회부양의 부담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 2) 이혼 증가 원인 및 영향

#### (1) 이혼 증가의 원인

일반적으로 이혼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인 가족이 해체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의 '건강성'을 반영하는 대표적 현상의 하나로 인식된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이혼은 증가추세를 보여 왔는데,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개인주의 확대가 이혼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된다. 오늘날 가족의 의미는 '제도'에서 '관계'로 변화하면서 과거의 한국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 중심을 둔 혈연가족이었다면 최근에는 부부간 애정을 중시하는 우애가족의 성격이 강해졌다.

4) 구명숙·홍상욱, 「독신생활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여성연구』, 67, 199~233, 2004.2.

5) 은기수,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102, 25~35, 2005. 4.

6) 이삼식 외,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7) 은기수, 「가치관, 혼인 및 출산」, 『전국가족조사에 따른 한국가족의 현실과 정책전망』, 여성부, 2004.

8) 장혜경 외,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9) 합계출산율은 15세에서 49세 이하의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의미한다.

이전 일단 가족이 형성되면 가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개인, 특히 여성의 유익은 경시되었다. 오늘날은 가족이나 자녀를 위해 무조건 참고, 개인을 희생하는 삶은 더 이상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혼생활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애정 및 사회심리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부부간 결혼만족도 및 의사소통 정도, 부부간 성격 및 가치관 불일치 등이 이혼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혼에 대한 태도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부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20대의 경우 40% 이상이 부부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이혼이 해결방안이라고 하였다. 30대의 경우 38.1%가 이혼할 수도 있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60세 이상의 경우 29.1%가 부부사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방하였다<sup>10)</sup>.

둘째, 이혼의 법적 요인의 변화와 관련된다. 과거의 가족법은 여성에게 전적으로 불리하였으나 1991년 개정 민법은 이혼시 재산분할권, 자(子)의 면접교섭권, 자녀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을 가능할 수 있는 등 이혼과 관련된 불평등 법조항들이 많이 개정되어 과거보다 이혼의 선택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다. 호주제 폐지와 함께 이혼 이후 재혼시 자녀의 성(姓)의 제한성이 약화된다는 점에서 향후 이혼의 제약성은 더욱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경제적 상황, 특히 경제활동 참여는 여성이 이혼결정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여성의 교육기회 증대 및 이로 인한 사회진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결혼생활이 불만족하는 경우 과거 남편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던 상황에서 보다 쉽게 이혼으로 끝맺을 가능성이 많아진다. 다른 한편,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성의 심화가 가족안정성에 영향을 미쳐 이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IMF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기불황 장기화로 인한 '생활고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이혼은 주로 어떠한 원인이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다양한 요인과 함께 이혼이 급증하는 현상 자체가 이혼을 망설이는 부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혼율을 증가시키는 일종의 '사회적 유행'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2) 이혼 증가의 영향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양육 및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한다. 가족 내 주요 기능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혼이 이

루어지는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이혼은 개인에게 실패감, 분노, 우울, 자존심 저하, 대인기피 등 정서적 불안 등 '삶의 질' 저하와 자녀 양육과 사회화, 이혼과 함께 불거지는 법적 갈등, 청소년 문제, 노인 문제 등과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족해체 등 사회의 유지 및 존속에 위협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혼의 사회적 영향은 매우 크다<sup>11)</sup>.

한편, 이혼은 이혼가족 구성원에게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혼가족은 보편적, 정형적 구조를 가진 가족에 비해 기능적 문제를 반드시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sup>12)</sup>, 가족내 갈등, 학대 등 가족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혼 이전에 비해 보다 기능적일 수 있다. 이혼은 이혼 후 문제와 적응과정에서 단기적 '위기'일 수 있으나 다른 한편 현재의 부정적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다<sup>13)</sup>.

### 4. 결혼지연 및 이혼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

현재 우리나라 결혼지연 및 결혼율 하락은

저출산과 관련, 여러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한국의 강한 가족주의와 성 불평등, 낮은 성행평성 등은 한국 여성들이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문제, 인구고령화, 사회경제적 비용문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 동안 저출산을 출산, 보육과 교육 문제 등을 중심으로 기혼자 위주의 대책이 모색되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젊은층의 결혼지연 내지 회피, 만혼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상황에서 결혼장려 정책이 저출산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결혼인구 비율을 1% 증가시키면 합계출산율을 0.342명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집에서 독신세 부과 등과 같은 강력한 주장도 제기되기도 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결혼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립지원, 결혼장려책이 시급하다. 즉 결혼연령층이 결혼비용 및 주거비용 마련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지연내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결혼장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과 같은 결혼장려책이 이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sup>15)</sup>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및 결혼비용 저리 융자, 민간단체, 기업이 상호 협조하는 결혼 중매 프로그램 운영 및 이에

10) 장혜경 외,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5.

11) 김미숙·원영희·이현송·장혜경,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2005.  
 12) 박세경, 「이혼율 증가와 사회적 지원방안」, 『보건복지포럼』, 93, 47~64. 2004. 7.  
 13) Demo, D. H., & Acock, A.,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1988, pp.619~648.  
 14) 조남훈,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정책적 함의」, 『출산 대응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5.  
 15) 대만은 신혼부부에게 생활수당이 지급중이며, 싱가포르의 주택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결혼장려금이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한 재정 지원이 모색된다. 또한, 결혼지연이 취업의 어려움, 직장의 불안정성 증대 등 경제적 상황의 악화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업 및 직업안정성의 회복에 대한 관련 정책의 실시가 시급히 요구된다<sup>16)</sup>. 이외에도 혼수 등 과도한 경제적 비용을 감수토록 하는 물질중심의 ‘결혼식 문화’를 탈피하여 실제 결혼생활을 예비하고 공부하는 ‘결혼문화’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기능적 이혼(functional divorce)’ 및 ‘유익한 이혼(good divorce)’이 이루어지도록 이혼 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는 이혼 자체가 부정적 결과를 수반하기 보다는 이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대처방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이혼과정이나 이혼 후 여러 문제들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혼가족이 어떠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이들 가족에 대한 종합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혼가족 및 구성원들의 개인적 삶의 향유 및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자녀양육 및 경제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아동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일차적으로 부모에게 돌지라도 국가는 부모로서의 책임을 법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책임 이행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혼 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이혼과 관련해서 발생 가능한 가족문제를 통찰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및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이혼제도, 특히 협의이혼제도 보완으로 이혼숙려기간과 이혼 전 상담의 제도화, 부부재산제·양육비 등의 전면적인 개선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혼가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사회적 편견이 해소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sup>17)</sup>.

## 5. 결 어

최근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핵가족화, 전통적 가족규범의 저하, 여성의 사회진출, 결혼지연, 가정에서의 자녀양육 기능 저하 등 가족생활이 변화되고 있고 아울러 이혼, 가족구성원의 유기, 자녀양육의 방치 등 가족의 해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결혼지연과 같은 가족 미완성 내지 이혼으로 인한 가족 해체의 경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된다. 러시아 속담에는 ‘전쟁터

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배 타러 나갈 때는 두 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 이혼할 때는 네 번 기도하라’라는 부분이 반드시 첨언되어야 할 것 같다.

결혼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연되거나 포기되지 않도록 결혼장려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준비된 결혼, 그리고 원만한 결혼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지원 서비스를 비롯한 가족생활교육, 가족친화적 고용문화 등 제반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막을 수 있는 이혼은 예방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준비된 이

혼, 그리고 후회 없는 이혼을 하도록 현명한 결정을 유도함과 아울러 이혼 결과에 대한 원만한 조정과 합의가 가능하도록 가족의 복리를 최대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혼위기에 있는 가족, 그리고 구조만 가족형태를 갖고 가족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상 정서적 이혼상태로 살아가는 소위 ‘쇼윈도우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잠재적’ 이혼가족은 어떤 위기상황이 촉발될 때 ‘실제적’ 이혼가족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원방안 역시 필요하다. 

결혼정보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조남훈, 「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책 현황과 정책적 함의, 『출산 대응방안』 심포지엄 자료집, 2005).

16) 이상식,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5~17. 2006. 1.

17) 김미숙 외, 『한국의 이혼실태와 이혼가족 지원정책 연구』, 2005.